

주간 통일정세

2015-04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남북관계 개선 협의 준비...고위급접촉도 가능"(1/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북한 정부·정당·단체들이 20일 오후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정은 신년사 관철' 연합회의를 열고 "공화국(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고 대범하게 풀어나갈 준비가 됐다"고 밝혔으며, 이어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온다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하고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고 보도함.
 - 회의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김용진 내각부총리,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등 정부·정당·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고 통신은 전함.
 - 이들은 회의에서 채택한 호소문에서 남측에 '무모한 체제통일론'을 버릴 것을 주문하고, 특히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해 광복 70주년인 올해를 '전쟁연습이 없는 첫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함.
- 北, 신년사 관철 연합회의 호소문 靑·국회 등에 발송(1/2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1일 통일부의 발표를 인용하여 북한이 소위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에서 채택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연합회의 명의 서한으로 21일 판문점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대한적십자사 등 5개 기관에 보내왔다고 보도함.
 - 뉴스는 이어 이번 전통문 발송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이런 일방적이고 선전적인 주장을 하지 말고 진정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우리의 대화 제의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북한, 대북전단 살포 비난…“남측과 상종할 필요있다”(1/21,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제 땅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사태하나 제대로 통제 못하는 현 남조선 당국과 상종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전함.
 - 대변인은 또한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비난하고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히 징벌한다는 것을 이미 선포한 상태"라며 "빠라 살포 망동으로 얻을 것은 과멸 밖에 없을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민화협 "종북소동은 관계개선 노력에 대한 도발"(1/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가 대변인 담화에서 신은미 씨의 '종북 논란' 등을 '체제대결 흥심'이라고 비난하며 "남측이 대결적 본색을 버리지 않는 한 남북 사이에 진정한 대화도, 관계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함.
 - 담화는 남측의 '종북 논란'을 '21세기 마녀사냥', '동족대결에 환장한 파쇼 광란' 등으로 비난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정부·정당·단체의 호소문 등 북측의 관계개선 노력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하였다고 통신은 전함.
 - 담화는 이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시급히 청산해야 할 것은 '종북'이 아니라 '종미'"라며 남측은 '대미추종자세'와 '반통일적 망동'을 버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성실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북한 "5·24조치 해제하면 이산가족 상봉 가능"(1/23, 연합뉴스)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3일 대변인 담화에서 "5·24조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남 사이에 그 어떤 대화나 접촉, 교류도 할 수 없게 되어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북제재인 '5·24조치'가 해제돼야 한다고 제안하였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함.
 - 뉴스는 조평통이 "민족분열로 당하고 있는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입장"이라며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하였다고 전함.

- 뉴스는 또 조평통이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인도주의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말로만 이산가족 문제를 떠들지 말고 대결을 위해 고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차단 조치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함.
- 북한 국방위 "남한당국 우리 제안 왜곡우롱하지 말라"(1/25,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25일 발표한 정책국 성명에서 "현 북남관계만이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초보적인 대화 분위기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TV가 전함.
 - 성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할 것' 발언과 통일부의 통일준비 계획 등을 거론, "남측이 요란스럽게 내뱉은 말에 비해볼 때 실천 행동은 너무나도 짝 판"이라며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함.
 - 이어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위한 역사적 조치들에 계속 도전해 나서는 경우 단호한 징벌로 다스려나갈 것"이라고 경고함.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위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가 내놓은 민족사적 조치들에 대해 제멋대로 해석하고 함부로 입을 놀리고 있다"며 "우리의 진정과 의지를 오관하거나 왜곡우롱하지 말라"고 주문함.
 - 이어 북측의 관계 개선 노력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국제사회의 고립 봉쇄'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우리는 언제 한번 미국의 덕을 본적도 없으며 남조선 당국이 있어 우리의 삶이 개선된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강변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남북관계 악화로 핵전쟁 터지면 참혹한 피해"(1/19,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9일 '과연 진정한 태도로 되겠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통해 남북관계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자며 "북남관계 악화의 지속으로 핵전쟁의 참화가 우리 민족의 머리 위에 들썩워지게 된다면 온 겨레가 참혹한 피해를 면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함.
 - 매체는 이어 "대화과 협상은 평화적 환경을 마련한 기초 위에서 진행될 때에야 서로의 신뢰와 진정성이 오가며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서 한미 연합군

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거듭 요구함.

- 매체는 또 별도의 글에서도 최근 남한이 실시한 해상전투단 실사격훈련과 한미연합훈련, 대구경북 동계 야외전술훈련을 거론하며 "진정 북남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무엇보다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함.

■ 북한, 한미연합사단 창설에 경고장...“경거망동 말라”(1/19,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9일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북침전쟁 도발 책동이 실전단계에서 모험적으로 감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 약정과 한미 연합사단 창설을 예로 꼽으면서 모처럼 마련된 남북 관계개선 분위기를 해치는 난폭한 도전이라고 비난하며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함.

■ “한미 군사훈련으로 남북관계 전진 불가”(1/2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2일 평양발 기사에서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에서 남북관계가 전진할 수 없다"면서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압박함.
- 신문은 지난 20일 평양에서 열린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로 여느 해보다 고조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특히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시키는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다고 전했으며 "(참석자들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지 문제를 토의하면서도 전쟁과 평화를 가르는 근본 문제가 풀리기만 하면 남북관계도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강조함.

■ 북한, '외래어 천국' 남한 비판...“현대판 식민지”(1/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남한에 대해 "문법에도 사전에도 없는 간략화 잡탕화된 통신언어가 범람하고 있고 자음만으로 간략화된 말이 무수히 생겨나고 있으며 우리말에 영어와 숫자를 뒤섞은 단어들 이 마구 만들어지고 있다"고 폄하하며 이런 영향이 북한에 미치는 것을 경계함.
- 그러면서 남한을 "제 것이 사멸되어 가는 땅, 미래가 없는 암흑사회"이자 "현대판 식민지 땅"이라고 비하하며 "우리의 문화어를 이질화시켜 보려는 적들의 책동은 결코 통할 수 없다"고 강조, 일상생활에서 남한과 미국의 언어 사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함.

- 북한, '대북전단 단속' 요구... "관계개선 시급석"(1/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과연 대화 의지가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반공화국 삐라살포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 하는 것을 가르는 시급석"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또 "삐라살포 하나 제대로 관리통제 못 하는 무책임한 현 남조선 당국과 마주 앉았댔자 과연 북남관계 문제에서 무엇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며 남한이 진정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전단 살포를 단속하라고 주문함.
 - 논설은 이어 "삐라살포 망동이 계속된다면 북남관계는 완전 파탄날 것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경고를 똑바로 새겨듣고 제 할 바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함.

- 북한 신문 "통일 지향적인 대화와 협상하자"(1/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대화와 협상은 북남관계개선의 기본방도'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남조선 당국이 '삐라 살포', '인권 모략'과 같은 대결 망동을 중지하고 대화와 협상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 신문은 이어 "북과 남이 편견과 주의주장 차이를 대범하게 덮어버리고 민족적 이익을 앞세우는 자세와 입장에서 통일지향적인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더는 '별치 않은 문제'로 언쟁을 벌이지 말자고 제안함.
 - 신문은 '전쟁참모부가 가동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는 한미연합사단 창설을 비난하며 양국이 무모한 전쟁 도발 책동을 그만두고 평화적 환경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평양 대성동 고구려고분 남북 공동발굴 추진(1/2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2일 보도를 통해 문화재청이 22일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도 북한 문화유산 남북 공동조사를 지속 전개할 예정이라면서 그 일환으로 "(개성) 만월대는 제7차 공동조사가 진행되며, 평양 대성동 고구려고분은 처음으로 공동발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전함.
 - 아울러 뉴스는 문화재청이 씨름과 금강산·설악산 유산 공동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세계유산 등재도 추진하는 등 남북한 문화재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음을 전함.

- 現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과 남이 불신과 대립의 혐애한 입장에서 벗어나 힘과 지혜를 합쳐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할 책임적인 시각"이라며 '외세 배격, 우리민족끼리' 강조(1.19, 중앙통신·노동신문)
- 南 검찰의 황선 구속(보안법 위반)·신은미 강제출국 등 '중북콘서트' 사건처리 관련 '남한의 독재사회 입증, 중북소동'이라며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에도 찬물을 뿌리고 있다"고 비난(1.19, 중앙통신·노동신문)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 대변인 담화(1.22)】 '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1.20)의 호소를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결정적 돌파구를 열어 나갈 호소로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한다'며 '온 겨레는 연합회의의 애국의 호소에 적극 화답하여 제2의 6·15시대를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1.22, 평양방송·중앙방송·중앙통신)
- '북과 남이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침략책동에 공동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간다면 북남관계 개선의 획기적 국면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우리민족끼리 이념에 따라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1.22, 중앙통신·노동신문)
- "민족이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는 것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풀어나가기 위한 기본방도"라며 '남북 당국뿐 아니라 각계각층이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 것' 주장(1.25, 중앙통신·노동신문· 중앙방송)
-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결성(1.25) 24주년 즈음 '범민련은 반통일 세력의 책동을 반대 규탄하는 투쟁을 대중화·조직화·적극화해야하며, 자주통일을 위한 전민족적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1.25, 평양방송)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北리용호 "긴장해소 첫걸음은 한미군사훈련 중단"(1/19, 교도통신)
 - 교도통신은 19일 보도를 통해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앞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함.
 - 리 부상은 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한반도 긴장 상황의 '근본 원인'이라고 언급했으며,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북미간 접촉에서 지난 10일 북한이 미국에 제안한 핵실험 임시 중단안의 의도와 목적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 북한 외무성 "베를린영화제 '인터뷰' 상영하면 테러선동행위"(1/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21일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이 '인터뷰'를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출품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아무런 인연도 없고 영화제의 목적과 성격에도 맞지 않는 명백한 테러 선동행위"라고 비판하며 상영 중단을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전함.
 - 성명은 또 독일이 미국의 대북 압살 책동에 편승하고 있다며 이 영화가 상영된다면 서방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곧 '자유·폭력·테러의 자유'를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북한 "미 CIA 고문실태 논의·조사위 구성"주장(1/22, AFP)
 - AFP는 22일 보도를 통해 서세평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가 22일 유엔 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고문실태를 논의하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고 전함.
 - 서 대사는 또 자신의 서한에서 제네바의 최고인권기구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신동혁 씨의 거짓 증언 등에 기초해 북한을 음해하는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매체는 전함.

- 북한 "오바마 '북한 붕괴' 발언은 패자의 넋두리"(1/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유튜브와의 인터뷰를 거론하며 "오바마의 머릿속에 주권국가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과 적대감이 들어차 있다는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힘.
 -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은 우리 공화국(북한)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다가 패배만 거듭하자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입 따위로 내부 와해를 실현하려고 한다"며 이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망상'이라고 강조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핵 억제력은 만능의 보검"(1/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선군의 기치 높이 나아가는 우리의 위업은 정당하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그 어느 나라나 민족도 침략과 약탈, 지배를 받으며 억눌려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핵 억제력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며 핵 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함.
 - 논설은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공격 대상 명단에 빠졌이 올려놓고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의 도수를 더한층 높이었다"면서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해 핵억제력을 보유하였다"고 설명함.
- 북한 "미국, IT기술을 무기화...사이버테러 주범"(1/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파괴하는 원흉'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소니 해킹'이 미국 내부의 소행이라고 밝힌 미국 보안업체 맥아피의 창업자 존 맥아피의 주장을 소개하며 "미국이 사이버테러의 주범"이라고 주장함.
 - 논평은 미국이 러시아·중국 등 반미국가와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사이버 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은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 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함.

- 북한 "탈북자 신동혁 증언 거짓...인권소동 중지하라"(1/20,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0일 개인 필명의 글에서 탈북자 신동혁 씨가 북한 정치범수용소 증언의 오류를 시인한 것에 대해 "허위는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논평하고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북한인권운동을 비난함.
 - 매체는 이어 "그(탈북자 증언)에 기초해 조작된 그 무슨 북 인권 관련 문서들 역시 전면 백지화, 무효화 돼야 하며 그를 걸고 감행되는 인권사무소 설치 등의 모든 인권 모략 소동 역시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함.

- 북한 "한미 합동군사연습 강행 시 자위적 대응조치"(1/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심사가 바르지 않은 자들의 고약한 행위'라는 글에서 미국을 겨냥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거듭 촉구하며 강행 시 자위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함.
 - 또 신문은 "방대한 핵전쟁 장비를 동원한 합동군사연습이 과연 방어를 위한 것인가"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군사 훈련이 명백히 남북 간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함.

- "북한, 대외 국면전환에 강한 의지"(1/2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1일 평양발 논평에서 북한이 1월 초 미국에 '한미 합동군사연습 임시중단 시 핵실험 임시중단'을 제안한 사실을 거론하고, 북한이 대외적으로 '국면 전환'을 위한 강한 의지가 있다며 미국을 향한 대화 제의의 진정성을 강조함.
 - 신문은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실질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조선의 요구"라며 합동군사연습과 핵실험의 임시 중단이 전제된 상황에서 "쌍방이 협상탁에 마주앉으면 그만큼 해당 논의가 심도 있게 진척될 수 있다"고 강조함.

- 북한, 푸에블로호 나포 47주년 맞아 미국 도발 경고(1/23,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1/22,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23일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나포 47주년을 맞아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을 자세히 기술하며 "우리에 대한 그 어떤 도발 책동도 단호한 징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주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대조선 고립압살 책동을 짓부셔 버리기 위한 전면 대결전에 한사람 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충천하다"며 "도발자들은 자비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함.

- 우리민족끼리도 23일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미국이 푸에블로호 사건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지 못하고 부나비처럼 날뛰다면 그때에는 그보다 더 처참한 중국적 멸망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미국이 뼈아프게 새겨야 할 푸에블로호의 교훈'이라는 글에서 "미국이 아직도 대조선압살 망상에 들떠 있다"면서 "푸에블로호는 침략자들의 패배상과 말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선전함.

■ 북한 "미국의 적대정책 파산...자멸행위될 것"(1/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미국의 대조선 정책은 총파산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침략 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인권 공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제재 '행정명령' 등을 거론하며 이같은 적대정책이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를 반석같이 다지는 결과만을 초래했다"고 주장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북한 "미국 대북제재, 남북관계 개선 방해"(1/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이정철 북한 사회과학원 사회정치학연구소 실장이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소니 해킹'을 이유로 한 미국의 대북 제재는 "한반도 지역 정세를 긴장시키는 무분별한 광증"이라고 언급하였음을 보도함.
- 통신은 리 실장이 "미국은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갖들 때마다 정세를 긴장시키는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다"며 대북제재 명령을 '히스테리적 소동'이라고 비난하였다고 전함.

- 또 그는 "이번 해킹사건이 없었다면 미국은 다른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정치 광대극에 매달렸을 것"이라며 미국은 한반도 정세 안정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함.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북한, 일본 역사왜곡 비판... "파렴치한 추태"(1/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역사를 왜곡하면 망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일본이 더러운 침략 역사와 반인륜적 범죄를 덮으려고 악을 쓰고 있다면서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를 '파렴치한 추태'라고 맹비난함.
 - 신문은 또 "과거 범죄는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역사의 흑막 속에 사라지거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지 않는다"며 "올바른 역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새 세대가 바른길을 걸을 수 없고 제 구실도 하지 못하며 나라의 전도가 막혀버린다"고 강조함.
- 북한, '고종 독살설' 주장하며 일본 과거사 청산 촉구(1/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고종 황제 96주기에 즈음해 '가리울 수 없는 일본의 과거 죄악'이라는 글에서 일본의 과거 만행 중에 고종 황제 독살 사건도 포함돼 있다며 "과거 범죄를 인정하고 배상하는 것은 일본의 역사적 책임이며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함.
 - 신문은 "다른 전범국가와 달리 일본만은 과거 범죄 사실을 가려보려고 책동하고 있다"며 "과거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시효가 절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임.

사. 대러시아

- "러시아-북한, 이달 중 비즈니스협의회 구성 계획"(1/21, 인테르팍스통신)
 - 인테르팍스통신은 21일 블라디미르 스트라슈코 러시아 상공회의소 부소장이 21일 모스크바에서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이 주재한 러-북 협력 사업 논의 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효율적 사업 협력과 공조를 위해 이달 말까지 양국 비즈니스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함.
 - 이날 회의에는 러시아 외무부와 경제개발부 관계자, 러시아 기업인 등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들은 회의를 통해 러시아 기업인들이 북한으로부터 복수비자(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방문을 허용하는 사증)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고, 상호 교역에서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를 이용한 결제가 가능해졌으며, 북한 정부가 러시아와의 협력 사업을 담당하는 별도 기관을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들이 있었다는데 견해를 같이하였다고 덧붙였다.

- "러시아 크렘린궁, 김정은 5월 방문 확인"(1/24, 미국의소리)
 - 러시아 대통령궁 공보실은 2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이 확인됐다"며 김 제1위원장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밝힘.
 - 공보실 관계자는 "라브로프 장관의 표현 자체가 김 제1위원장의 초청 수락을 의미하는데도 보도 과정에서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함.

아. 국제기구

- 세계기금 "북한 말라리아 퇴치사업 2년 연속 최고점"(1/22, 미국의소리)
 - 국제 질병 퇴치 기구인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 세계기금'(이하 세계기금)이 지난해 북한이 진행한 말라리아 퇴치 사업에 최고점을 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함.
 - 방송은 세계기금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여러 국가에서 진행된 질병 퇴치사업 중 북한 내 말라리아 퇴치 사업이 성과와 재정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다며 5단계 평가등급 중 가장 높은 'A1' 등급을 줬다고 전함.

- 北, 유엔에 서한 "신동혁 증언 기반 北인권결의는 무효"(1/22, 로이터통신)
 - 로이터통신은 22일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탈북자 신동혁(33) 씨의 거짓 증언에 기초한 북한인권결의가 무효라고 압박했다고 보도함.
 - 자 대사는 반 총장과 유엔총회에 보낸 서한에서 "신동혁은 사기꾼이자 기생충"이라며 "(신동혁의 증언 같은) 거짓된 기록에 기반해 유엔 총회가 강제로 채택한 모든 북한 인권결의안은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북한에 정치범수용소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신 씨가 13세 소녀를 성폭행한 범죄자라고 몰아붙였다고 통신은 전함.

자. 기타 국가

- 특이사항 없음

- 【北 인권연구협회 대변인 담화(1.20)】 '신동혁'씨 정치범수용소 인권탄압증언 일부 번복 관련 '허위문서에 기초하여 강압 채택된 모든 반공화국 인권결의들이 무효'라며 '적대세력들은 인권결의를 비롯한 모략문서들을 당장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1.20, 중앙통신)
- 리정철(사회과학원 사회정치학연구소 실장), 미국 등 제재 및 고립압살에도 '우리(北)의 제도붕괴는 커녕 정반대의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며 '사회주의제도 우월성' 주장(1.21, 중앙통신)
- 北 외무성 대변인, 1.23일 중통 기자 질의의 대답을 통해 이스라엘-日 수상들의 對北발언 공동기자회견(1.19) 관련 '이스라엘은 남을 걸고들기 전에 팔레스티나 인민들에 대한 학살만행의 주범이며 파괴자로서의 반인륜적이고 호전적인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1.23, 중앙통신)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압둘라(90)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타계에 애도의 뜻 전달(1.24, 중앙통신)
- 올해 일본의 국방예산 최대 증액 등 "군사대국화, 재침책동"으로 "동북아시아에는 전쟁의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경종(1.25,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北 노동당 중앙총서, 1월 25일 우간다 전국항쟁운동 중앙이사회 앞으로 '우간다 전국항쟁운동승리' 29주년 축전(1.25, 중앙통신)
- 이란이슬람교연합당 부총비서(하미드 레자 타라기), 1월 17일 自國 주재 北 대사와 담화 및 '北 위업지지' 표명(1.25, 중앙통신)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신발공장 시찰...“품질 높여라”(1/2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가 북한의 첫 사출운동신발생산기지(스포츠화 대량생산 공장)인 류원신발공장을 시찰하고 질 제고를 주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함.
 - 통신은 김 黨 제1비서가 경공업 토대를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자면 생산자들의 정신력 발동을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인민들이 쓰려고 하지 않는 질이 낮은 제품은 아무리 많이 생산하여도 소용이 없다"면서 생산의 질 제고를 촉구하였다고 전함.
 - 통신은 또 김 黨 제1비서가 "신발생산용섬유와 수지, 각종 기초화학제품의 국산화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그 질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이름난 제품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신발을 생산하기 위해 공장발전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어 신발생산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에서 모두 풀어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고 전함.
- 북한, 추격기·폭격기 훈련...김정은 직접 기획·지휘(1/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고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 발기에 따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공군) 근위 제1항공 및 반항공사단관하 추격기·폭격기 연대의 비행전투훈련이 진행됐다"고 24일 보도함.
 - 특히 통신은 이번 훈련 취지와 관련, "신년사에 도전해 새해벽두부터 똥감태기(온몸에 똥을 뒤집어쓴 모습) 도둑고양이들을 내몰아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는 반공화국 심리모략 책동에 매달려 최전연전방의 분위기를 음산하게 만드는 추악한 인간추물들과 그를 방치해두는 무책임한자들을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올려세우고 불벼락을 들뜨을 적개심이 만장약 돼있다"고 설명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김정일 이복동생 김평일, 체코대사로 이동(1/2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1일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동생인 김평일 주폴란드 북한 대사가 최근 주체코 대사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김평일의 후임으로는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이 조만간 부임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함.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특이사항 없음

- 김정일 출생일(*2.16, 광명성절)을 맞으며 제19차 김정일화 축전 평양에서 진행(2월 중순~,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 예고(1.19, 중앙통신)
- 조선인민군 군인들, 1월 20일 마두산혁명전적지 참관 출발모임을 인민무력부 김일성父子 동상 앞에서 진행(1.20,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일성·김정일의 <광복의 천리길> 도보 90주년·답사행군 진행 40주년' 기념 중앙보고회, 1월 2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최룡해(黨 비서)·김용진(내각 부총리)·김수길(평양시黨 책임비서)·김승두(교육 위원장)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1.21, 중앙방송·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모범적인 단위들"에 3중3대혁명붉은기(보건성 1월 25일제작사)·2중3대혁명 붉은기(회창군 의약품관리소 등 7개 단위)·3대혁명 붉은기(중구역 신암종합진료소 등 17개 단위) 수여 정령 제320호(1.15字) 발표(1.21, 중앙방송)
- '경제강국·문명국을 건설하는 것은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 없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조국해방 일흔돌과 당창건 일흔돌을 혁명적 대경사로 빛내어 나가자'고 선동(1.23,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승호혁명사적지 관리소 창립 40돌 기념 보고회, 1월 22일 박태덕(황해북도 당책)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1.23, 평양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북한 "금강산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4월 투자설명회(1/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오는 4월 투자설명회를 진행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통신은 오웅길 원산지구개발총회사 총사장이 "이 지대를 높은 봉사 수준과 거대한 봉사 능력이 겸비된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투자 방식에 대한 교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한다"며, "이 지대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하였음을 전함.
 - 통신은 또 오 총사장이 사업 상황에 대해 "현재 개발총계획이 완성되고 부문별 계획 수립과 하부구조 건설 및 개건 보수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나. 주요 후속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북한, 지정까지 영업하는 편의점 등장...시장기능 확대(1/1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9일 '새로운 상업형태/표어는 안정, 편의'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지난해 12월20일 평양에 새로운 형태의 상점이 개업했다"고 보도함.
 - 매체는 보도에서 "이 상점은 연쇄점의 형태를 갖춘 봉사망으로 1차로 평양의 중구역, 보통강구역 등 세 군데에서 개점했다"고 밝혔으며, '황금별상점'이라는 명칭의 이 상점은 식료품과 각종 일용품을 판매하며 아침 6시부터 자정까지 영업을 한다고 전함.
 - 이 상점은 앞으로 배달서비스와 식료품 중심의 이동판매뿐 아니라 세탁봉사, 비행기와 열차 탑승권 예매서비스도 할 계획이며, 또 상점망 확장사업을 통해 오는 2월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에는 모란봉구역과 낙랑구역, 평천구역에 문을 열어서 올해 봄까지 평양시에만 20개 정도의 상점을 갖춘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매체는 전함.

라. 대외 경제관계

- EU, 대북 영양개선 사업에 18억 5천만원 지원(1/21, 미국의소리)
 -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식량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170만 달러(약 18억 5천만원)를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함.
 - 방송은 아일랜드의 비정부기구 '컨선 월드와이드'가 20일 "최근 EU로부터 대북 지원용 예산 150만 유로를 최종 승인받아 오는 3월부터 강원도에서 새로운 영양 개선과 식량안보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으며 이 지역에 농작물 생산량 증대를 위한 보전농법 전수, 식품가공기계 제공, 협동농장 관개시설 설치 등을 주로 하면서 관공서와 일반 가정에 화장실도 지어줄 계획이라고 전함.

- 첨단기술제품 '나노 빛 촉매형 공기멸균기(수술실·식료부문 등 이용)'의 '100% 국산화, 조작 편리, 멸균능력' 등 제품 선전(1.19, 중앙통신)
- 개성시 청년들의 새해 보름간 '560여t 거름·3만 여점 중소농기구들 농촌지원' 및 전력공업성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우리식의 전력관리체계"개발 및 '자료통신 속도 20배 향상' 등 선전(1.19, 중앙방송)
- 北, 청천강 계단식발전소건설 진행 소식 보도(1.20, 중앙방송)
- 평안북도, 온실남새 생산성과 선전(1.24, 중앙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북한 "출산건강 의료 서비스 강화...국제기구와 협력"(1/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서현철 '조선가족계획 및 모성유아건강협회' 서기장의 말을 인용해 이 협회가 올해 국제가족계획연맹의 계획에 맞춰 연합진료소 설립과 출산 건강 봉사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함.
 - 서 서기장은 "협회는 지난 25년간 인민의 재생산(출산) 건강에 관한 권리를 옹호하며 모든 사람에게 선전, 교육, 의료봉사를 해주고 있다"고 소개함.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북한, HD방송 개시…콘텐츠는 아직 표준화질(1/19, 노스코리아테크)
 - 노스코리아테크는 19일 "북한의 TV방송국인 조선중앙TV가 3696MHz 주파수 대역에서 DVB-S2 포맷으로 고화질 방송을 시작했다"고 보도함.
 - 새 방송은 HD방송의 16:9 화면비율을 4:3로 변형한 '레터박스' 형식으로 송출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HD방송에 속하지만 콘텐츠는 아직 표준화질(SD)이라고 매체는 덧붙임.
- 북한TV, 아이폰·사물인터넷 소개…"상상 실현된다"(1/21,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1일 '과학기술 상식,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제품의 지능화'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이례적으로 최근 해외에서 열린 가전제품 전시회 영상을 내보내고, 독일·미국 등 선진국 기업들의 제품을 여과없이 노출하며 전 세계적으로 대체로 자리잡은 사물인터넷(IoT)을 소개함.
- "평양관광대, 외국인강사 모집에 100명 몰려"(1/23,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3일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북한전문 '주체여행사'가 평양관광대에서 한 달간 영어와 관광학을 가르치고 북한 관광도 하는 조건으로 자원봉사 강사 모집 공고를 낸 결과 22일 현재 1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 보도함.
 - 이에 따라 주체여행사는 당초 오는 5월과 11월 각각 5명의 외국인 강사를 북한에 보낼 예정이었지만 지원이 쇄도해 5~11월 매달 5명씩을 보내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고 방송은 전함.
 - 방송은 이 사업은 지난해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조선국제여행사를 통해 주체여행사에 제안하면서 추진된 것으로, 주체여행사는 지난해 8월 한 차례 시범사업 후 이번엔 본격적으로 '자원봉사 관광' 상품을 출시하였으며 강사로 선발된 사람들은 평양관광대와 국가관광총국의 사업 경비, 교과서 개발, 도서관 건립 등의 명목으로 약 1천160달러를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임.

- 북한도 토론수업에 관심... "수학도 토론식으로" (1/25, 교육신문)
 - 북한 주간 교육신문 최신호는 25일 "새로 집필된 고급중학교(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는 새 지식을 토론 방법으로 가르치는 새로운 형식의 수업이 제시됐다고 밝힘.
 - 교육신문은 토론식 수학 수업이 "능숙한 교수자의 교수 자질과 방법을 필수적 요소로 하는 난도 높은 수업"이라며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제시함.
 - 신문은 "교원은 학생들이 토론을 완료할 때까지 불필요한 안내 설명을 피하고 인내성 있게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새 지식을 서둘러 설명하지 말고 '토론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지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새 지식을 찾아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임.

- 제41차 정일봉상 전국 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1월부터 8월까지 기간에 전국 1만여 명 청소년학생들 참가) 개막식, 1월 20일 청춘거리 농구경기관에서 진행(1.20, 중앙통신)
- 김정일 출생일(2.16, 광명성절)을 맞으며 제20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꾼 체육경기대회(2월16일까지 농구·배구·탁구·태권도·사격경기 등 평양체육관·청춘거리에서 진행) 개막식, 평양체육관에서 진행(1.21, 중앙통신·평양방송)
- 北, "온 민족이 나라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 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것"을 호소하는 선전화들(온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평화적 환경을 마련하자! 등) 출판(1.21, 중앙통신)
- 제41차 정일봉상 전국 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 '빙상경기', 1.20~23 대성산 미천호에서 600여명의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1.23, 중앙통신)
- 北 교예배우들, '제39회 몬테카를로 국제교예축전'(1.15~18, 모나코)에서 금상 수상(1.24, 중앙통신)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중국, 북·미 접촉 '환영' ... "6자회담 조건조성 기대"(1/20,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북한과 미국이 싱가포르에서 '트랙 1.5(반관반민)' 형태의 접촉을 한 데 대해 환영을 표시하면서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 조성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접촉에 대한 중국의 의견을 묻는 말에 "중국은 북·미의 관계개선을 지지한다"면서 "우리는 관련국들이 대화와 접촉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답함.
 - 화 대변인은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는 관련 대화와 접촉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조건을 조성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임.
- 한·미·일, 28일 일본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개최 (1/22, 연합뉴스)
 - 외교부는 오는 28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힘. 이 회담 참석을 위해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7~29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임.
 - 황 본부장은 방문 기간 한·미·일 6자 회담 수석대표 회의 및 한·미 및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각각 하고 북한 및 북핵 문제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협의를 할 예정임.
 - 한·미·일 3국은 이번 회의에서 비핵화 대화 재개 문제와 함께 북한의 도발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임.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이른바 투트랙으로 접근한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음.

- 중국,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 기대감 (1/23,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오는 28일 일본에서 한·미·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개최되는 데 대해 주목하면서 이번 회의가 6자회담 재개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우리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이 열린다는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관련 대화와 접촉이 6자회담 재개라는 목표를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화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추진과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는 각 당사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며 당사국들의 공동 책임이기도 하다"면서 "현 정세에서 당사국들은 공동으로 노력하고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대화·협상의 궤도로 복귀해 6자회담 재개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함.

- 러·일, 모스크바서 북핵 6자회담 재개 논의 (1/24, 연합뉴스)
 - 러시아와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23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만나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함.
 -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발표한 언론보도문에서 "이고리 모르쿨로프 차관이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한반도 핵 문제와 관련한 현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6자회담 재개 방안 모색에 주안점이 주어졌다"고 설명함. 그러나 회담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앞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최룡해 노동당 비서는 지난해 11월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표명했고 이에 러시아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힘.

나. 미·북 관계

- 미국 신동혁 거짓증언 논란에 "북한 인권유린 명백" (1/21,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탈북자 신동혁 씨가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증언을 담은 자서전의 일부 내용을 번복해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북한의 인권유린은 명백하다며 모든 정치범수용소의 폐쇄를 거듭 촉구함.
 -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신 씨의 증언 번복 관련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한 이메일 답변에서 "논란은 신 씨가 '가장(the most)' 끔찍한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느냐, 아니면 '매우(very)' 끔찍한 정치범수용소에 있었느냐의 문제"라면서 이같이 주장함.
 -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은 정치범수용소 폐쇄를 비롯해 유엔 인권조사위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동시에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북한을 계속 압박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미 국무부 "대북정책 변화없다 ... 공허한 제안 거부"(1/22,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간) 현행 대북 정책에 전혀 변화가 없으며 이를 바꾸는 것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쟈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과 미국이 싱가포르에서 한 '트랙 1.5(반관반민)' 형태의 접촉과 관련해 "우리(미국 정부)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으며 입장 변경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함.
 -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조건 없는 대화 복귀를 제안한 데 대해서도 "위협적인 언사나 공허한 제안(empty proposals) 모두 긍정적인 신호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함.
 - 사키 대변인은 "미국뿐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북한이 2005년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공(부담)은 오랫동안 북한 쪽에 있다. 어떤 뒷받침(국제 의무 준수 약속 등)이 없는 새로운 제안도 우리는 분명하게 거부한다"고 설명함.

- 오바마 "북한 결국 무너져 ... 군사해결책 답 아니다"(1/24,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말함. 그는 또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미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군사적 해결책"보다는 인터넷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함.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유튜브 스타 행크 그린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힘.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지구 상에서 '가장 고립되고', '가장 제재를 많이 받고', '가장 단절된 국가'라면서 "그런 종류의 독재체제는 이 지구 상에서 똑같이 만들어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함.
 -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제재 수단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다"면서 "북한은 모든 돈을 전쟁 무기에만 투입한다. 북한이 100만 군대를 보유하고 핵 기술과 미사일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우리의 능력은 다소 제한돼 있다"고 말함. 이어 "군사적 해결책이 답은 아니다"고 덧붙임.

다. 중·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일·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러·북 관계

- "러시아-북한, 이달 중 비즈니스협의회 구성 계획"(1/22, 연합뉴스)
 - 러시아와 북한이 효율적 사업 협력과 공조를 위해 이달 말까지 양국 비즈니스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블라디미르 스트라슈코 러시아 상공회의소 부소장이 21일(현지시간) 러·북 협력 사업 논의 회의에서 이같이 밝힘.
 - 북한에서 사업을 진행중이거나 추진하려는 러시아 기업인들과 북한 측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창설하겠다는 의미임.

-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회의에서 "지난해에 러·북 협력과 관련한 협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는 사전 준비 성격이었다"며 "올해는 기존 합의들을 이행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北, 러시아와 300억弗 전력망 개선 사업 추진 (1/23, 조선일보)
 - 북한과 러시아가 작년 말 북한의 철도 현대화 사업에 합의한 데 이어 북한 전력망 개·보수 및 송전(送電)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 베이징 대북 소식통은 이날 "러시아가 북한의 남은 전력망을 바꿔주는 대가로 북한 희토류를 받는 사업을 북·러가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사업 규모는 200억~30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말함.
 - 또 양측은 러시아 극동 지역의 남은 전기를 북한에 보내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짐.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작년 10월 극동 아무르주에 있는 최대 수력발전소인 '부레이 발전소'를 방문했으며, 이달 초 북한은 송·배전 기술자들을 러시아에 파견했다고 소식통은 말함.
- "러시아 크렘린궁, 김정은 5월 방문 확인" <VOA> (1/24,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는 5월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미국의소리 (VOA)방송이 러시아 대통령궁 공보실을 인용해 24일 보도함. 러시아 대통령궁 공보실은 23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이 확인됐다"며 김 제1위원장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밝힘.
 -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김 제1위원장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보내왔다"고 밝히면서 김 제1위원장의 방러 여부를 두고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됨.
 - 김 제1위원장이 오는 5월 러시아를 방문하면 지난 2011년 그의 집권 이후 첫 외국 방문이 됨. 한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힘.

바. 기타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미국, '한·미·일 北정보공유 구체 기준' 마련 착수 (1/23,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간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이하 정보공유)' 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보공유 약정이 체결된 만큼 이 사안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함.
 - 국방부의 한 소식통은 "정보공유를 하려면 3국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현재 3국 간에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임을 시사함.
 - 정보공유 기준에는 3국이 공유할 정보의 대상과 구체적인 절차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해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1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이날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이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짐.

- 서면 美차관 1월 28~29일 방한 ... 한반도정책 포괄 조율 (1/24, 연합뉴스)
 -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이 1월 29일 오전 서울에서 만나 한반도 정책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24일 밝힘. 양측은 올 들어 처음 개최되는 이번 고위급 면담에서 북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임.
 - 한·중·일 3국 순방차 동북아 지역을 찾는 셔먼 차관은 중국 방문에 이어 1월 28일 입국함. 그는 조 차관과의 면담 외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 예방, 청와대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질 것으로 알려짐.
 - 외교부는 "셔먼 차관의 방문은 올해 한·미 간 첫 고위급 교류로, 한·미 간 동맹 현안 및 지역, 글로벌 문제에 관련한 협의를 통해 올해 양국간 정책 공조의 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나. 한·중 관계

- **차대통령, 중국무원 부총리 접견 ... 경제협력 논의 (1/23,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왕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접견하고 한·중 관계와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중국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맡고 있는 왕 부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2015 중국 관광의 해' 개막식을 주재하기 위해 전날 방한함.
 - 박 대통령은 접견에서 중국어로 "양넨지샹(羊年吉祥)"이라고 언급한 뒤 "이 말과 같이 올해 양의 해에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길 기원한다"며 이어 "세계경제가 다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중국은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서 '중국의 꿈'을 향해 전진하는 것을 인상깊게 보고 있다"고 말함.
 - 왕 부총리는 '라오핑여우(老朋友·오랜 친구)'라 불리는 시 주석과 박 대통령의 친분을 언급하며 "대통령님은 중국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외국 지도자다"라고 전함.

- **최경환-왕양 中부총리 면담 ... 양국 경제협력 논의 (1/23, 연합뉴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왕양 중국 국무원 부총리(경제 담당)와 면담을 갖고 양국 경제 및 문화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왕 부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열리는 '2015 중국 관광의 해' 개막식을 주재하고자 방한함.
 - 양국 부총리는 이번 면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서명과 발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이 협조하며 노력하기로 함. 최 부총리는 작년 12월 개정된 위안화 직거래시장에 중국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함.
 - 이에 왕 부총리는 한국 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성공적인 정착이 위안화 국제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를 표하고, 필요한 고려사항을 공유키로 화답했다고 기재부는 전함.

- **시진핑, 차대통령에 "남북간 상호제의 긍정적"(1/23,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3일 "최근 남·북한간 상호 제의를 긍정 평가한다"고 밝힘. 시 주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왕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보낸 구두친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함.

- 시 주석은 또 "한국과 함께 공동 노력해 각 측간 대화와 접촉을 추진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조건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의 언급 가운데 '각 측간'의 의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뒷부분에 6자회담이 언급돼 있는 것을 보면 6자회담의 각 당사자들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국은 남북간 뿐 아니라 북·미, 북·중 등 모든 대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함.
 - 박 대통령은 "한·중 간 북핵 불용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관련국간 대화의 재개를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선순환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함.
- 산업통상자원부 실장 "한·중 FTA 다음주 가서명 예상" (1/23, 연합뉴스)
 -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된 한중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가서명이 이르면 다음주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힘.
 - 한국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방중한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3일 베이징 주재 한국특파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한·중 FTA 가서명은 다음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함.
 - 권 실장은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지난달 1일 11개 업종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6월을 목표로 우리 기업의 FTA 활용방안, 국내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최종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함.
- 한·중, 올해 50개 인문유대 강화사업 실시 (1/23, 연합뉴스)
 - 외교부는 왕양 중국 국무원 부총리의 방한 계기에 올해 중국 측과 인문유대 강화 차원에서 50개 사업을 하기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힘.
 - 올해 사업은 학술·교육 분야 10개, 지방 교류 15개, 청소년 교류 7개, 문화 분야 13개 등으로 구성됨. 외교부는 이 가운데 한중 청소년 지도자 포럼, 한·중 청년 지도자 100명 상호교류 사업, 한·중 인문교류 테마도시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 한·중 양국은 2013년 6월 정상회담에서 인문분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인문교류 공동위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으며 공동위 차원에서 지난해에는 19개의 사업이 진행됨.

다. 한·일 관계

- 한·일 軍위안부 국장급 협의 … "의미있고 건설적"(1/19,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이 19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6차 국장급 협의를 함.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올해 처음 개최된 이날 협의에서 양측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임.
 -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은 이날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회의하고 나서 "상호 의미 있고 건설적인 의견 교환·협의를 있었고 앞으로 이 협의의 진전을 위해서 상호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함.
 - 한·일 양측은 수교 50주년 기념행사에 관해서도 실무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는 등 이날 약 3시간 반에 걸쳐 회의했으며 이후 만찬장으로 자리를 옮겨 현안을 계속 논의함.

- 유흥수 주일대사 "올해 한·일 정상회담 성사에 초점"(1/19, 연합뉴스)
 - 유흥수 주일본 한국대사는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금년도에는 모든 초점을 맞추겠다"고 19일 말함. 그는 이날 일본 도쿄의 한국대사관에서 한국 언론사 특파원을 만나 이같이 밝힘.
 - 유 대사는 올해가 한국과 일본의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거론하고서 "아직도 양국 관계가 원만한 상태로 개선되지 못하고 새해를 맞이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일 관계 정상화에 필요한 외교 환경을 조성하도록 대사관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
 - 유 대사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과 다른 교민 조직 사이의 갈등을 풀고 민단을 중심으로 여러 활동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하려면 민단을 개혁하고 열린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임.

- 일본 외무상 "한국과 고위급 정치적 대화 원해"(1/20, 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0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간에 고위급의 정치적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밝힘.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브뤼셀에서 '독일마셜기금'(German Marshall Fund of U.S.) 주최로 열린 유럽연합(EU)-미국-일본 3자 포럼에서 한·일 관계에 역사 문제 등 여러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때문에 더욱

높은 정치적 수준에서 솔직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말함.

- 그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양국 간 다각적인 대화를 통해 대국적인 관점에서 중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함. 그는 한국과 중국에 대해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놓고 있다며 현재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기 위한 일정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임.
- 한편, 이번 3자 포럼에 미국 측 대표로 참석한 성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19일 EU 대외관계청(EEAS) 관계자들과 만나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설명하고 동북아시아 안정과 평화를 위한 미국과 EU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EU 외교소식통이 전함.

■ '독도=일본땅' 日방위백서 한글판 배포 … 軍 늑장대응 (1/21,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시한 자국 방위백서 한글 요약본을 최근 배포한 것으로 확인돼 우리 정부가 일본에 엄중 항의함.
-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 요약본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배포했다"며 "이에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오늘 오전 9시50분에 야마노 마사시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초치해 그러한 부당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항의했다"고 전함.
- 외교부도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해당 자료 발간에 대해 항의하고 이 자료의 배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함. 이날 항의는 오진희 외교부 동북아1과장이 주한일본대사관의 관계자를 불러서 한 것으로 알려짐.

■ 한·미·일·호주, 군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교도통신> (1/23, 연합뉴스)

- 한국, 미국, 일본, 호주의 군 법무담당관회의가 지난주 하와이에서 열려 해외파병과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를 논의했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함.
-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태평양 주변 4개국 이 처음으로 이런 종류의 회동을 갖고 외국 군대의 활동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는 지역에 유엔평화유지군 파병시 발생 가능한 법률적인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힘.
- 4개국은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협력방안으로 1년에 한 차례 정례회의를 하기로 했으며 오는 5월 20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법무담당관회의에 이날 회의결과를 보고할 예정임.

- 주일 韓무관부, '日방위백서 한글판' 두 달간 무대응 (1/23, 연합뉴스)
 -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부가 지난해 11월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시한 일본 방위백서 한글 요약본을 우편으로 받고도 두 달 가까이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부는 작년 11월 27일 우편으로 일본 방위백서 한글판 20부를 수령했다"며 "당시 국방부에 관련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고 국방부 지시에 따라 어제(22일) 모두 일본 방위성으로 반송됐다"고 밝힘.
 -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부에는 육군 준장인 국방무관과 대령인 해·공군 무관이 근무하고 있음. 무관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일본 방위백서 한글판을 받고도 본국에 보고하거나 책자를 반송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바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중 관계

- 중국, 필리핀 두둔 미국에 "충동질 말라"(1/22,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을 두둔하는 미국을 겨냥, 다툼을 충동질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함.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제5차 미국·필리핀 전략대화에 참석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중국을 비판한 데 대해 "비(非)당사국은 시비(다툼)를 충동질하거나 선동하는 말은 마땅히 적게 해야 한다"고 말함.
 - 앞서 러셀 차관보는 이번 회의에 미국 대표로 참석, "우리는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괴롭힐 수 없다는 점을 믿고 있다"며 중국을 자극함. 이와 관련, 화 대변인은 "중국은 대국과 소국이 모두 평등하다는 입장으로 대국이 소국을 괴롭히는 것에 반대하며, 소국 역시 이유없이 트집을 잡아서 안 된다"고 말함.

바. 미·일 관계

- 백악관 관리 "日, 과거사 해결해야만 진정 가까운 우방"(1/22, 연합뉴스)
 - 에반 메데이로스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과거사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만 미국과 일본이 진정으로 가까운 우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메데이로스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미·호주 동맹' 세미나에서 "우리는 일본이 영향력 있고 신뢰가 가며 역동적이고 강력한 우방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말함.
 - 메데이로스 보좌관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올해초 새해 기자회견에서 2차대전 종전 70주년 기념담화와 관련해 내놓은 발언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며 "올해 과거사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뤄나갈 것인가에 관한 매우 유용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힘.

사. 미·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아. 중·일 관계

- 일본 외무상 "아루나찰은 인도땅"... 중국 "엄중 항의"(1/19, 연합뉴스)
 - 인도를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강연을 통해 중국이 인도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변경지역에 대해 "인도 영토"라고 발언한 데 대해 중국당국이 강력히 반발함.
 - 기시다 외무상은 인도에서 이뤄진 강연이 끝난 뒤 가진 질의응답에서 "(티베트 남부에 있는) 아루나찰지역은 인도 영토"라며 "내가 아는 바로는 중국과 인도가 (영유권을 놓고) 이곳에서 대립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이 지역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가 19일 인도 언론을 인용해 보도함.

- 이에 대해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보도 내용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이미 일본을 향해 엄중한 항의를 제기하고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 중국 "일본 지도자, 침략역사 진정으로 반성해야"(1/19, 연합뉴스)
 - 중국정부는 2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에서 유대인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역사적 비극'을 거론한 것과 관련, "일본은 침략역사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함.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과 중국인민의 항일전쟁승리 70주년이 되는 올해는 역사를 결산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중요한 시기로 우리는 일본 지도자의 관련 발언에 주목한다"고 밝힘.
 - 특히 "일본은 (말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국가들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함.
- 중국-일본, 해상충돌 방지용 핫라인 설치 추진 (1/23, 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둘러싸고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막도록 긴급 연락 시스템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이 23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전날 일본 요코하마(横浜)시에서 열린 고위급 해양협약에서 중국 해경국과 일본 해상보안청 사이에 연락 창구를 만들도록 협력하기로 함. 양측은 이에 따라 긴급 상황에 연락할 핫라인(비상용 직통전화) 설치, 해상수색·구조협정 등을 체결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임.
 - 중국과 일본은 최근 중국 선박이 일본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 일대에서 산호 채취를 일삼는 것과 관련해 해상 범죄를 막으려고 협력하자는 방침도 확인함.

자. 중·러 관계

- 중국, 러시아에 항공기 수출 첫 계약 (1/20, 연합뉴스)
 -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제작한 항공기를 러시아에 처음으로 수출하게 됐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0일 보도함.
 - 통신은 항공기 생산 국유기업인 하얼빈항공기공사가 러시아 플라이항공에 소형 프로펠러 항공기 '윈(運)-12' 4대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함.
 - 윈-12는 프로펠러 추진 방식의 소형 여객기(19석 규모)로, 지난해 11월 광둥(廣東)성 주하이(珠海)에서 열린 제10회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에서 미국에 20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맺기도 함.

차. 일·러 관계

- 러시아 외무부 "일본은 역사 교훈 배워야"(1/22, 연합뉴스)
 - 러시아 정부는 21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쿠릴 4개섬(북방영토) 문제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비시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일본은 역사의 교훈을 배우려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군국주의 일본이 나치 독일과 함께 2차대전 전의 현상을 군사력으로 파괴, 많은 나라를 점령했다"면서 쿠릴 4개섬은 이러한 전쟁의 결과 러시아 영토가 됐다고 지적함. 성명은 이어 기시다 외무상은 "전쟁의 원인 및 결과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수정하려고 있다"고 비판함.
 - 벨기에를 방문한 기시다 외무상은 20일 브뤼셀 강연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것도 힘에 의한 현상변경이지만 북방영토 문제도 힘에 의한 현상변경"이라고 언급함.

© 국제전략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한 "탈북자 신동혁 증언 거짓...인권소동 중지하라"(1/20, 연합뉴스)
 - 북한은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20일 개인 필명의 글에서 탈북자 신동혁 씨가 북한 정치범수용소 증언의 오류를 시인한 것에 대해 "허위는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논평하고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북한인권운동을 비난했음.
 - 이 글은 신 씨의 이번 고백으로 "(신 씨가) 지금까지 입에 올려왔던 반공화국 모략선전이 모두 거짓이며 상전들의 각본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 이어 "그(탈북자 증언)에 기초해 조작된 그 무슨 북 인권 관련 문서들 역시 전면 백지화, 무효화 돼야 하며 그를 걸고 감행되는 인권사무소 설치 등의 모든 인권 모략 소동 역시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북한, 신동혁 거짓 증언 비난... "유엔 인권결의 무효"(1/21, 연합뉴스)
 - 북한 인권문제 연구기관인 조선인권연구협회는 20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탈북자 신동혁 씨가 정치범수용소 인권탄압 증언의 오류를 인정한 만큼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 담화는 미국이 신 씨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협잡놀음'을 벌였다고 미국 등은 인권결의안을 당장 취소하고 국제사회 역시 북한 인권에 대해 공정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음.
 - 또한 신 씨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시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범죄적인 정체를 깨끗이 털어놓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자의 죄행을 만천하에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北, 유엔에 서한 "신동혁 증언 기반 北인권결의는 무효"(1/22, 연합뉴스)
 - 로이터통신은 22일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탈북자 신동혁(33) 씨의 거짓 증언에 기초한 북한인권결의가 무효라고 압박했다고 보도했음.

- 또 북한에 정치범수용소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신 씨가 13세 소녀를 성폭행한 범죄자라고 몰아붙였음.
 - 신 씨는 지난해 10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성폭행 의혹은 조작된 것이라고 해명한바 있음.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북한 아동들의 고문 피해를 기술하면서 신 씨가 14세에 고문을 당했고 재봉틀에 찍혀 손가락을 잃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신 씨는 최근 고문을 20세 때 당한 것이라고 번복했음.
- 북한 "미 CIA 고문실태 논의·조사위 구성" 주장(1/23, 연합뉴스)
 - AFP의 보도에 따르면, 서세평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는 22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오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 전체 회의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고문실태를 논의하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며, 리수용 북한 외무상도 이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 밝혔음.
 - 또한 제네바의 최고인권기구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신씨의 거짓 증언 등에 기초해 북한을 음해하는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 어렵다는 북 이혼수속, 뇌물 고이면 딱딱(1/23,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은 이혼수속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뇌물을 통해 이혼이 용이해지고 있다고 함.
 - 평안남도 주민소식통은 "딸 시집 보내고 나서 장마당에 가서 두부 한 모 사가지고 (집에) 왔더니 그 사이에 시집간 딸이 보따리 싸가지고 왔다는 말이 나돌 만큼 날이 갈수록 이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음.
 - 소식통은 이혼 급증의 이유로 과거와는 달리 남편에 대한 북한 여성들의 자기주장이 강해지고, 이혼 수속이 전보다 쉬워졌다는 점을 꼽았으며, 실제로 판사에게 뇌물 100달러 정도만 고이면 이혼허락 판결이 어렵지 않다고 함.
 - 또한 합의 이혼의 경우는 이보다 적은 30~40달러의 뇌물이 소요되며,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재판소 판사는 뇌물 액수가 많은 쪽 편을 들어 이혼 가부를 판결하는 게 보통이라고 알려졌음.

- 함경남도 주민 소식통은 "이혼허락 판결이 날 경우 자녀는 여성들이 부양하는 게 일반적이며 남편은 어린 자녀가 소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자녀양육비로 매달 봉급의 10%를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으나, 이 양육비는 북한 돈으로 몇 백 원에 불과한 돈이기 때문에 있으나마나 한 액수라고 함.
- 북한, '55명 고아 키우는 산골부부 소개해 눈길(1/23, 데일리NK)
 - 북한 노동신문은 23일 '두일령의 작은 산골 집은 이 땅의 사랑과 정을 노래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평안북도 한 군(郡)에서 20년 간 55명의 고아들을 키우며 생활하는 산골 부부가 김정은의 감사를 받았다고 보도했음.
 - 신문은 "제 핏줄을 거두기도 힘든 때 그 많은 아이들을 키운 공은, 바치고 바쳐도 보답할 수 없는 어머니 조국을 위한 것"이라며 "부부에게 책임비서를 비롯한 군 책임일꾼들이 텔레비전과 녹화기에 이르기까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줬다"고 선전했음.
 - 평안북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당이 어머니로서 인민들과 생사운명을 같이 하라는 올해 신년사에 꿰맞춘 거짓말"이라며 "앞으로 55명의 고아들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자기 먹을 식량을 농사짓고, 가축 등을 기르는 노동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 북한 인권

- 한국 정부 '신동혁 씨 오류 인정...북한 악용 말아야(1/20, 미국의 소리)
 - 탈북자 신동혁 씨가 자신의 북한 정치범 수용소 체험을 담은 자서전 '14호 수용소 탈출'의 일부 내용을 오류라고 시인한 데 대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를 선전 수단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고 경계했음.
 - 이 관계자는 신 씨가 오류라고 인정한 부분은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대응의 큰 흐름을 해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만 보더라도 80여 명의 증언과 240여 명의 비공개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북한이 이들의 증언을 모두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말했음.

- 그러나 신 씨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참상을 상징하는 인물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신 씨가 오류라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선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반영된 신 씨의 증언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외통위, '北인권법 패스트트랙' 추진에 제동(1/20, 연합뉴스)

- 외교통일위원장이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물론 외통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20일 북한인권법의 패스트트랙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북한인권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움직임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음.
- 유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도) 외통위에서 6개월, 법사위에서 3개월, 이후 본회의에 가면 (통상적으로) 2개월 정도 해서 총 330일 정도가 소요된다"면서 "실제 19대 국회 마지막에 처리될 수 있을까 말까 한 정도"라면서 패스트트랙을 통한 북한인권법 처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음.
- 이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패스트트랙에 태우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유 의원이 당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한 셈임.
- 유 의원은 향후 외통위에서 처리할 현안 등을 거론하며 "외통위는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만약 (여당에서) 한 사람이라도 기권이나 반대하면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부결 가능성도 제기했음.
- 이에 더해 외통위에서 처리하기 어려움을 밝히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여야 지도부가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면 북한인권법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여야 지도부 간 담판을 통한 해결을 주장했다.
- 이날 유 의원의 반대에 이완구 원내대표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원내대표는 여전히 패스트트랙을 통한 북한인권법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음.
-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도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일각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패스트트랙 운운하고 있다"면서 "이는 수적 우위를 통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음.

- 미국 신동혁 거짓증언 논란에 "북한 인권유린 명백"(1/21,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탈북자 신동혁 씨가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증언을 담은 자서전의 일부 내용을 번복해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북한의 인권유린은 명백하다며 모든 정치범수용소의 폐쇄를 거듭 촉구했음.
 -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신 씨 관련) 이번 보도로 증거가 자명한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의 초점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는 수백 명의 희생자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지금도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끔찍한 인권위반 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미국은 정치범수용소 폐쇄를 비롯해 유엔 인권조사위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동시에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북한을 계속 압박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유럽의회 인권소위, 북한 인권개선 국제협력 방안 논의(1/22, 연합뉴스)
 -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인권소위에 참석한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함.
 - 유럽의회 의원들은 EU가 북한 인권 문제에 지속적으로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했으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일 것도 제의했음.
 - 유럽의회 인권소위 소속의 크리스티안 프레다(루마니아) 의원은 독재자 니콜라이 차우셰스쿠 통치 당시의 루마니아 인권 상황을 북한 상황에 비유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과 북한 인권 개선의 시급성을 지적했음.

- 커비 "신동혁 번복 논란에도 북한 인권유린 명백"(1/22, 연합뉴스)
 -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21일(현지시간)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탈북자 신동혁씨의 자서전 번복 논란에도 "북한에서의 인권 유린은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음.
 - 커비 전 위원장은 "신씨는 위원회에 증언한 300명에 달하는 증인 가운데 한 명에 불과하다"면서 "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수많은 증언과 증거의 토대 위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지적했음.
 - 또한 신 씨의 증언내용 오류는 신 씨가 탈출한 정치범수용소에 관련된 것일뿐이지, 지난 65년여 동안 북한에서 일어난 광범위한 인권 탄압에 대한 인권보고서의 내용과 결론, 위원회의 유엔에 대한 권고에 영향을 줄만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수잔 솔티 "북한인권 개선에 대북정보 유입이 결정적"(1/24, 연합뉴스)
 -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세계인권 세미나에서 "북한에도 이른바 정보시대가 도래되고 있다"며 "북한 인권개선에는 대북 정보유입이 결정적"이라고 주장했다.
 - 솔티 대표는 북한 내에서 배급제 붕괴와 시장의 형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이 변화를 겪고있다고 평가했으며, 북한 정권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아 김정은 정권이 엘리트 그룹에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게 막고 인권유린 그룹에게 책임이 따를 것임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음.
 - 이와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은 한·미·일 동맹관계를 두려워하면서 세 국가와의 관계를 이간하고자 노력하는 만큼 오히려 이들 국가는 국제적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압박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세미나에는 미국 기독교 인권단체인 '차이나 에이드'의 밥 푸 회장,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튼 연구원, 헤리티지 재단의 월터 로먼 선임연구원 등도 참석했음.

- 다루스만 "신동혁 책 오류, 북 인권보고서 신뢰성에 영향 없어"(1/24, 연합뉴스)
 - AP통신에 따르면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탈북자 신동혁 씨가 북한에서의 경험에 대한 진술을 일부 번복한 것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한 유엔 보고서의 "완결성과 신뢰성"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견해를 밝혔음.

- 다루스만 보고관은 "우리는 신 씨의 증언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고서 북한의 반인권 범죄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묻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그는 같은 날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줄 필요가 있다"며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가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출석해 증언할 기회를 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또한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문제가 안보리 정식안건으로 채택된 것에 중국의 반대가 예상된다면서도 국제사회의 압력이 커지면 ICC 회부가 성사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 미 전문가 '신동혁 18호 관리소 감금 북한도 인정'(1/24, 미국의 소리)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지난해 10월 25일 대남선전용 인터넷매체 '우리민족끼리'에 북한이 신동혁 씨를 비방하기 위해 올린 '거짓과 진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분석한 결과 탈북자 신동혁 씨가 18호 관리소 출신임을 북한이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인 멜빈 씨는 "동영상에서 신동혁 씨의 아버지는 그들이 봉창리에서 살았다고 밝히는데 봉창리는 18호 관리소에 포함된 지역이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진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했다.
 - 이 외에도 '거짓과 진실' 동영상에서 신 씨 아버지와 새어머니,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을 다수 발견했는데, 신 씨 아버지의 재혼 시기와 당시 신 씨 나이, 신 씨가 평안북도 운산군 부흥광산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고 북한이 주장한 시시점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 멜빈 씨는 동영상 자체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 주장의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측이 신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으로 추정했다.

- 윤 외교 "북한 공세에도 국제사회 북한인권 기본인식 불변"(1/25, 연합뉴스)
 -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참가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인권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채택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문제를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의제로 삼은 바 있어 본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또한 신동혁 씨의 증언 일부 수정 문제는 마이클 커비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언급했듯이 200여 명의 증인 중 한 명에 불과하고, 유엔도 보고서에 대한 검증과 토론을 통해 이를 채택한 것이라며 "국제사회도 이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3. 탈북자

- 40대 여성탈북자 등친 파렴치한 남한 남성(1/19, 한리일보)
 - 청주 상당경찰서는 19일 40대 여성탈북자에게 접근해 결혼하자고 속여 정착금과 아파트입주금, 북에 두고온 자식을 데려오기 위해 모아온 돈 등 8,000여만 원을 뜯어낸 박모(50)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 택시 운전기사인 박 씨는 지난해 3월 우연히 알게 된 A(42·여)씨에게 접근해 결혼할 것처럼 속여 8개월간 40여 차례에 걸쳐 8,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음.
 -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국내 사정에 어두운 A씨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으며 A씨에게 뜯어낸 돈은 대부분 도박 등으로 탕진했음.
- 탈북자 출신 외과 전문의 국내 첫 배출(1/22, 연합뉴스)
 - 고려대 안산병원은 지난 2007년 탈북자 신분으로 한국에 정착한 뒤 4년간의 외과 전공의(레지전트) 수련과정을 마친 고윤송(41)씨가 지난 20일 외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 북한에서 의사 생활을 한 탈북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딴 경우는 10여명 정도가 되지만, 고 씨처럼 외과 전문가가 된 것은 처음이라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 고 씨는 앞으로 통일보건의료 분야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생각이 라고 전함.

■ 통일부 "하나원 탈북자 직업교육 강화"(1/23, 자유아시아방송)

- 통일부는 23일 오전 정례회견을 통해 탈북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교육과정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위해 올해부터 탈북자 정착지원기관인 강원도 화천의 제2하나원에 심화교육과정을 새로 확정했다고 밝힘.
-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6개의 장기과정에는 요양보호사, 중국어 능력 인증시험(HSK), 용접기능사, 간호조무사, 제과·제빵기능사, 미용기능사 등이 있으며, 1~2주의 단기과정은 요식업 취업준비, 우리말 캠프, 재직자 보수교육 등 3개 분야로 이뤄졌음.
- 또한 기능교육과 함께 언어, 대인관계 등 기초소양교육을 병행함으로써 북한이 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임.

■ "탈북자 직업중 사망...北거주 유족에 손해배상하라"(1/25, 연합뉴스)

- 한국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산업재해로 사망한 탈북자의 북한 거주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
-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잠수부로 일하다 사망한 탈북자 A씨의 북한 거주 부모와 배우자가 선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선장 등은 A씨 북한 유가족 3명에게 1억1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25일 밝혔음.
- A씨는 탈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1년부터 동해안에서 해산물 채취 작업을 하는 잠수부로 일하다가 3년 만인 2013년 3월 잠수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음.
- 재판부는 A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선장의 과실을 인정하고, 사용자인 선주도 선장과 직무집행상 불법행위 때문에 일어난 이 사고와 관련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음.
- 그러나 "A씨도 조업 전에 생명과 직결된 공기정화기나 공기 유입호스와 배기구의 이격 거리 등을 직접 확인해 스스로 안전을 도모했어야 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힘.

- 이번 소송은 먼저 탈북해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던 A씨의 형인 B씨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이 이루어지면서 2013년 8월 법원으로부터 재판의 법정대리인이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뒤 제기해 이뤄졌으며, 소송의 원고는 북한에 사는 부모와 A씨의 배우자로 임.
- A씨의 유가족은 1년 5개월여간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며 1억1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지만 남북관계 등에 비춰 배상금이 당장 이들에게 전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기 때문에, 소송을 대리해 진행한 법정대리인이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형 B씨가 보관해야 하며 1년에 한 번씩 법원으로부터 배상금을 잘 관리하는지 재산관리 상황을 보고해야 함.
- 또한 배상금은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려면 반드시 용도를 밝히고 법원의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음.
- 따라서 만약 중국 등을 통해 비밀리에 북한의 유가족에게 배상금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법원의 사전허가 없이는 안 되고 사후에라도 전달했다는 사실 역시 증명할 방법이 쉽지 않아 원고들이 아닌 그 누구라도 임의로 돈에 손댈 경우 법적 처벌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음.
- 울산지법의 한 관계자는 "법원은 소송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재산관리인을 바꿀 수도 있다"고 밝혔다.
- 피고들이 항소해 재판이 계속될 수 있지만 이후 1심 판결대로 확정될 경우 손해배상금은 재산관리인인 형이 은행에 예치해 두거나 북한 유가족들이 탈북해 받아가기 전까지는 당장 손을 대기 어려울 전망이다.

4. 이산가족

- "북한, 이산가족상봉 조건 내걸지 말아야"(1/19, 데일리NK)
 - 국내 탈북자 단체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조건으로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북한민주화위원회, NK위치,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등 탈북자 단체들은 19일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조건을 거는 반인도적 행태를 더 이상 부리지 말라"고 비판했음.

- 북한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8일 '이산가족상봉 무엇부터 해야 하겠는가'라는 개인 필명의 글을 통해 "이산가족상봉을 위해서는 5·24조치 해제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대북전단 중지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명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형적인 북한의 화전양면(和戰兩面) 전술"이라며 "정부는 안보와 인도주의적 문제를 나눠 대응하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북한 "5·24조치 해제하면 이산가족 상봉 가능"(1/23,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3일 대변인 담화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북제재인 '5·24조치'가 해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조평통은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하면서 "남조선 당국이 인도주의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말로만 이산가족 문제를 떠들지 말고 대결을 위해 고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차단 조치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北, 이산가족 문제-5·24조치 연계 유감"(1/23, 연합뉴스)
 - 정부는 23일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북한이 23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북제재인 '5·24조치'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북한이 순수 인도적인 사안인 이산가족 문제를 이와 전혀 무관한 5·24조치 해제와 연계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 정부는 "5·24조치 해제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한 만큼 남북간 대화를 통해 접점을 마련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북한은 스스로도 이산가족 상봉을 가장 절박한 인도주의 협력사업이라고 말한 만큼 부당한 전제조건을 달기보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우리측이 제안한 대화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5. 납북자

- 특이동향 없음

6. 국군포로

- '강제복송 국군포로 일가...납북 가족에 국가배상 판결(1/25,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최정인 판사)은 국군포로 이강산(북에서 사망)씨의 납북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3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 최 판사는 "국가는 국군포로 또는 그 가족이 억류지를 벗어나 귀환을 목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바로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내 송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국군포로 가족이 중국에 불법 체류하면서 구조를 기다리는 위급한 상황이었는에도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이한 신병처리와 실효성 없는 외교적 대응을 했다"며 "이로 인해 납한을 신뢰하고 귀환시도를 한 이씨의 북측 가족이 결국 북송되면서 납북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 다만 "외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따르고, 중국 공안당국의 검문조치가 우발적이어서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7. 대북지원

- 북민협 "대북 인도적 지원 규제 철폐해야"(1/20, 연합뉴스)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대북지원 규모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며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규제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북민협은 "북한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밀가루, 쌀, 옥수수 등의 식량 지원을 허용하고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비료, 못자리용 비닐 등의 반출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전면 재개하고 2009년 중단된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지원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밖에도 북민협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대북 인도적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관협력위원회'를 설립해 대북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미 NGO 지원 140만 달러 의약품, 북한 도착(1/20, 미국의 소리)
 - 미국의 민간단체 아메리카어스(AmeriCares)가 지난 10월 북한에 보낸 14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과 위생용품, 의료용품 등이 북한에 도착했다고 밝힘.
 - 도나 포스트너 대변인은 이번에 보낸 지원물품에 항생제와 심혈관 관련 의약품, 진통제 등 의약품과 겨울장갑, 목도리, 유아용 담요, 칫솔, 의료용품 등이 포함됐다고 전함.
 - 지원품은 '평양과 평안도, 황해북도 내 병원과 보건소 6곳'에 전달될 예정임.
 - EU, 대북 영양 개선 사업에 150만 유로 지원(1/21, 미국의 소리)
 - 아일랜드의 비정부기구 '컨선 월드와이드'의 크리스탈 웰스 대변인은 최근 유럽연합으로부터 대북 지원용 예산 150만 유로를 최종 승인 받아 오는 3월부터 강원도에서 영양개선과 식량안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와 블랙 북한 담당관은 컨선 월드와이드의 새 대북 사업은 강원도 통천군과 법동군에서 주민들의 영양 개선을 돕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했다.
 - 두 지역 주민들에게 수확량 증대에 효과적인 보전농법을 전수하고 식품가공기계를 제공하며, 협동농장에 관개시설을 설치해 줄 예정이며, 각급 기관과 가정들에 화장실도 지어줄 계획임.
 - 이번 사업으로 현지 어린이와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 5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으며, 이 사업은 앞으로 3년 반 동안 진행될 예정임.
 - 한편 컨선 월드와이드는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로부터 지난 2013년 지원 받은 9백만 스웨덴 크로나, 미화110만 달러로 오는 5월까지 황해북도에서 식수, 위생 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임.

- 또 아일랜드 외교부 개발협력국으로부터 지난 2012년 지원 받은 160만 유로, 미화 185만 달러로 올해 말까지 강원도와 평안남도 지역에서 산간 지대를 개간하는 등 식량 생산 증진 사업을 지속할 예정임.
- 미 종교단체, 북에 19년간 육류지원(1/21,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기독교단체 메노나이트(Mennonite)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회계년도인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모두 11만 9천640개의 고기통조림을 북한에 지원했다고 밝혔음.
 - 이들이 지원하는 고기는 칠면조와 쇠고기, 그리고 돼지고기 등으로 지난 회계년도에 보낸 양만 해도 모두 95톤이며 지원사업을 위해 후원금 36만 달러가 소요됨.
 - 이 단체가 보내는 고기는 북한 전역에 있는 어린이와 결핵 및 간염 환자들을 중심으로 분배됨.
 - 북한의 경우 메노나이트는 1995년부터 고기 통조림을 보내고 있으며, 올해도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고기 통조림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 모금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음.
- 세계기금, 대북 말라리아 퇴치 사업 최상 평가(1/22, 미국의 소리)
 - 세계기금 대변인실은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 세계기금' (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이 지난해 북한에서 진행된 말라리아 퇴치 사업의 사업 내용과 재정지출 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둬 최고 등급인 'A1' 등급으로 평가했다고 밝힘.
 - 'A1' 등급은 세계기금의 예산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질병퇴치 사업을 평가하는 총5등급(A1, A2, B1, B2, C)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으로, '목표와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Exceeds expectations)'를 의미함.
 - 세계기금은 지난 2013년 대북 말라리아 사업도 최고 등급으로 평가했었으며, 2010년부터 대북 말라리아 사업에 총 2천5백만 달러 가량을 투입해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한편 세계기금은 지난해 북한에서 진행된 결핵 치료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와 기대 수준을 충족시켰다'며 최고 등급 보다 한 단계 낮은 'A2'등급으로 평가했음.

- 유엔, 대북긴급지원 200만 달러(1/23,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은 23일 북한을 비롯해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등 12개국에 총 1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음.
 -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전 세계에서 인도주의적 상황이 가장 심각하지만 국제사회의 지원이 충분치 않은 국가들에 제공되는 자금으로, 북한도 '자금이 부족한 인도주의 위기국' 으로 분류돼 전체 지원금 1억 달러 중 200만달러를 배정받았음.
 -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은 2013년에 210만 달러를 지원 받았고 2012년에는 700만 달러, 2011년에는 500만 달러를 받은 바 있으며, 이날 발표된 유엔의 대북 지원금 200만 달러도 북한에서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펼치는 유엔 기구들에 배정될 예정임.

8. 북한동향

- 일본의 과거 성노예 범죄를 거론하며 '역사에 전무후무한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라고 비난하며 '그 피값을 기어이 반내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1.18, 중앙방송/김승도 낮을 불힐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
- 【北 인권연구협회 대변인 담화(1.20)】 '신동혁'씨 정치범수용소 인권탄압증언 일부 번복 관련 '허위문서에 기초하여 강압 채택된 모든 반공화국 인권결의들이 무효'라며 '적대세력들은 인권결의를 비롯한 모략문서들을 당장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1.20, 중앙통신)
- 日 문부과학성이 교과서에서 위안부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내용 삭제 허용한 것 관련 '더러운 침략역사와 반인륜범죄를 덮어버리려고 악을 쓰는 일본 특유의 파렴치성과 도덕적 저열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추태'라고 비난(1.20, 중앙통신·노동신문/역사를 왜곡하면 망한다)

- 일제의 고종 황제 시해 96년 관련 이는 "우리나라의 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엄중한 테러행위였다"고 비난 및 일본의 '과거청산' 촉구(1.21, 중앙통신/극악무도한 범죄의 역사를 덮어버릴 수 없다)
- 고종 황제 서거 96주기를 즈음하여 일본의 '고종 황제 독살설'을 주장하며 '일제의 만행은 조선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이고 전대미문의 국가테러행위였다'고 비난 및 '과거사 청산' 촉구(1.22, 중앙통신·민주조선)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